

(2) IMF 프로그램의 妥當性 論難

- (背景) IMF의 경제 안정화 프로그램은 국가별로 큰 차이없이 경제 성장 억제, 물가 상승 억제, 경상수지 적자 축소 등 유사한 조치들이 취해졌음
- (一般的 論議) 최근 IMF 처방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, 이는 민간 자본 유출입의 급증, 국제 금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문제, 다자적인 해결 방안 결여 등으로 요약됨
- (韓國 經濟에 대한 論難) 한국에 대한 IMF 프로그램은 과거 개도국의 처방과 유사하며,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의 특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
- (向後 課題) 대외적으로는 외환 유동성 확보와 국제신인도 제고, 대내적으로는 금융부문의 조속한 구조조정에 노력해야 함

IMF의 경제 안정화 프로그램의 내용은 국가별 차이 없이 유사함

○ IMF 支援에 따른 經濟 安定化 프로그램의 內容

- 1994년 멕시코 사태이후 태국, 인도네시아, 한국에 대한 IMF의 경제 안정화 프로그램은 국가별로 특이성을 다소 인정하지만 대체로 경제 성장 억제, 물가 상승 억제, 경상수지 적자 축소 등 상당히 유사한 조치들이 취해졌음(아래 표 참조)

<IMF 지원에 따른 경제안정화 프로그램 비교>

구 분	멕시코		태국		인도네시아		한국
연도	94	95	97	98	97/98	98/99	98
실질 성장률(%)	3.1	1.5	2.5	3.5	5.0	3.0	1.0~2.0
경상수지/GDP	-0.0	-0.3	-5.0	-3.0	-2.7	-2.2	30억 달러 흑자
재정수지/GDP	-	0.5	-1.6	1.0	0.8	1.0	균형 또는 소폭 적자
소비자 물가(%)	6.9	19.0	9.5	5.0	10	10	9.0
경제 구조 조정	-정부지출 축소 -공기업 민영화	-건축 재정 -농업/산업 경쟁력 제고	-국영기업 민영화 -국민차사업 지원폐지 -국내독점기업 (대통령 친척의 재벌) 구조 개혁	-부실 금융기관 정리 -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-대기업 구조조정			

최근 IMF 처방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은, 민간 자본 유출입의 급증, 구제 금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문제, 다자적인 해결 방안 결여 등으로 요약됨

#### ○ IMF 處方의 效率性에 대한 一般的 論議

- 최근 금융시장의 세계화 및 자유화가 진행되어 개도국으로의 자본 유출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IMF 처방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음
- 첫째, 금융의 세계화는 개도국의 단기 자본 유입 비중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는데, 특히 민간 은행 중심의 자본 유입을 가속화시키고 있음
  - 이에 따라 과거 국제수지 불균형 및 정부 중심의 채무 문제를 다루었던 IMF의 안정화 정책 기조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
  - 즉 민간 자본의 급격한 국경간 이동으로 인하여 한국에서의 위기 사태가 타국가로 매우 빠르게 전파되는 양상이 계속되지만, IMF의 지원은 아직도 개별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
- 둘째, 일부에서는 아시아의 위기가 95년 멕시코를 구제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'도덕적 해이(moral hazard)'論을 주장하고 있음
  - 즉 멕시코 구제 금융은 전세계의 채권자와 채무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, 美재무부와 IMF가 구제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주었다는 주장임
  - 대규모 채무 불능 상태에 처한 은행들로 하여금 손실을 스스로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주장임
- 셋째, 97년 태국 바트화 위기로 시작된 동아시아 통화 위기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확산 효과를 고려하여 지역적 내지는 세계적인 처방 조치가 필요하였음
  - 즉 동남아시아 통화 절하는 다른 인접 국가들의 통화 절하 압력을 가중시켜 전체 동아시아 국가들의 환율 절하를 초래하고 있음
  - 따라서 이들 통화 하락 국가들의 전체적인 조율을 통해 환율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, IMF는 이러한 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
  - 이는 결국 엔화 가치를 하락시켜 일본의 금융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

한국에 대한 IMF 프로그램은 과거 개도국의 처방과 유사하며, 한국 경제의 특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

- 결론적으로 엔화의 안정이 시급한 과제이며,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유럽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함

#### ○ 韓國에 대한 IMF 處方 論難

- 한국에 대한 IMF 프로그램은 과거 멕시코, 태국, 인도네시아의 처방과 유사하며,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의 특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
- 과거 멕시코나 브라질 등의 외채는 대부분 정부나 공공 부문에서 발생한 반면, 한국은 1,000억 달러에 달하는 단기 부채가 거의 민간부문에서 발생한 외채라는 점이 간과되고 있음
-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한국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IMF 처방이 다른 개도국들과 동일하게 이루어졌음
- 또한 IMF의 지원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니며 단기적인 유동성 제공으로 위기 상황을 일시적으로 회피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, 선진 민간 금융기관이 이에 동참하지 않으면 외환 부문과 국내 자금시장의 안정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간과하고 있음
- 따라서 외국 금융기관들의 상환 재연장이나 새로운 자본 제공 등과 같은 민간 부문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
- 태국, 인도네시아 등과는 달리 한국은 이미 경제 변수의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음
- 96년 이후 실질 환율 및 명목 환율이 절하되고 있어 자체적인 균형 조정이 진행되고 있었음
- 재정 수지는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, 국제 수지도 개선되는 과정이었음
- IMF의 처방은 경상수지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성장률 억제와 고금리 등 표준적인 처방만을 내놓음으로써 금융 공황 사태를 가속화시킴
- 고금리 정책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외국 자본 유입이 원활해져야 함은 물론, 한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야 될 것임
-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고금리를 통한 해외 자본 유

입은 당분간 크게 늘어나질 않을 전망이다

- 부실 금융 기관의 정리는 당연히 취해야 하는 조치이나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
- Jeffrey Sachs는 한국에 필요한 것은 경제 개혁이지 응급 수술이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금융 개혁의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함
- 단기적으로 은행의 신용 공급 중단에 따른 한국 경제의 붕괴를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외환 유동성 확보 및 BIS 기준 적용은 유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

대외적으로는 국제신인도 제고, 대내적으로는 금융산업의 조속한 구조조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

○ 向後 課題

- 대외적으로는 외환 위기의 극복과 국제신인도 제고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함
- 가장 시급한 것은 외환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임
- 이를 위해서는 단기 외채를 중장기 외채로 전환시키는 것이 관건임
- 대내적으로는 금융부문의 조속한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
- 고금리와 기업 연쇄 부도의 원인은 부실 금융기관이 BIS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출금 회수에 나서기 때문임
- 따라서 BIS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부실 금융기관은 조속히 정리하고, 한편으로는 BIS 기준 충족 조건을 완화하면서 수출 금융 확대 등 자금 경색 해소를 위해 힘써야 함

(IMF 연구실)